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13 년 10 월 1 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4 장

담당: 홍보실 오가혜 연구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정부의 기초연금 이행방안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공감한다 53.7%, 공감하지 않는다 41.5%

복지에 대한 인식, 세대-이념-정파에 따라 큰 차이 보여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 여론연구센터는 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이행방안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과반이 근소하게 넘는 53.7%의 응답자가 이번 복지공약 수정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41.5%로 높게 나타났다.
- 40 대 이상, 보수성향,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복지공약 수정안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 대 이하, 진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에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초연금 이행방안에 대한 세대-이념-정파에 따른 균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 복지공약 수정안이 국가 재정을 고려한 공약 수정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8.3%에 이르렀다. 복지공약의 전면 파기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22.3%였다.
- 기초연금을 대선공약과 같이 65 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18.1%에 불과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극빈층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로 나타났다.
- 향후 정부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0.4%,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0.1%였다.
- 이번 발표된 기초연금 이행방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응답자의 향후 국민연금 유지 의사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거나,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응답이 각각 30.5%, 29.5%였으며, 탈퇴한다는 응답은 14.0%로 낮았다. 하지만 역차별 논란의 중심이었던 30 대의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할 것이라는 비율은 25.3%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조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정부의 기초연금 이행방안 발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아래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
조사방법: 면접원 전화인터뷰(CATI), 유무선(50:50) RDD
표집방법: 지역, 성, 연령별 할당추출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

주요결과

- ✓ **정부가 발표한 복지공약 수정안에 대한 공감 여부:** 공감함 53.7%, 공감 않음 41.5%
지난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이행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공감하는 측과 공감하지 못하는 측으로 첨예하게 양분된 상태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대, 이념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큰 폭의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 별로 살펴본 결과, 20대와 30대의 경우 복지공약 수정안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1.2%, 54.2%로 높았으나, 40대부터 공감한다는 비율이 과반을 넘어 더 높게 나타났다. 30대 이하 연령층과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복지정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보수-진보, 새누리당 지지층-민주당 지지층 간의 복지공약 수정안 공감도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 새누리당 지지층은 이번 기초연금 이행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었고, 진보-민주당 지지층은 공감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무당파가 수정안에 공감하는 비율은 39.5%, 공감하지 못하는 비율은 56.7%였다.

	전체	연령대별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진보	중도	보수	새누리당	민주당	무당파
공감	53.7	34.3	44.7	53.1	68.1	68.4	42.6	47.1	66.4	73.6	39.1	39.5
공감 않음	41.5	61.2	54.2	44.8	28.2	18.8	55.9	49.6	31.4	22.3	54.8	56.7
모름/무응답	4.8	4.5	1.1	2.1	3.7	12.8	1.5	3.3	2.2	4.1	6.1	3.8

- ✓ **복지공약 수정안에 대한 의견:** 국가재정 고려한 공약 수정 68.3%, 복지공약의 전면 파기 22.3%
이번에 발표된 기초연금 이행방안이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한 수정인지, 대통령의 대선공약 전면 파기인지 여부를 물어봤다.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이번 복지공약 수정안을 국가재정을 고려한 수정으로 봤다. 국가재정을 고려했을 때 공약수정은 불가피했다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번 문항에서도 연령대별로 상당한 인식차가 엿보였다. 20대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복지공약의 전면 파기라는 의견(36.4%)이 타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공약수정이다: 53.5%). 50대와 60세 이상 세대에서 공약수정이라는 의견이 각각 82.5%, 70.4%로 나오며 복지 공약의 전면 파기라는 의견은 단지 10% 초반에 머물렀다. 30대와 40대는 공약수정이란 의견이 각각 64.9%, 69.9%, 복지공약의 전면 파기다라는 의견은 각각 27.9%, 24.0%였다.

- ✓ **기초연금에 대한 의견:** 소득 따라 차등지급 50.8%, 극빈층 선별지급 23.5%, 원래 공약대로 이행 18.1%
과반에 이르는 한국인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18.1%에 불과했다. 극빈층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선별적 복지, 민주당 지지층은 보편적 복지에 좀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65세 이상 일괄지급 9.4%,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59.9%, 극빈층만 지급 26.5% vs.
민주당: 65세 이상 일괄지급 26.2%,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42.8%, 극빈층만 지급 19.5%)

- ✓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복지강화 해야 50.4%, 복지축소 해야 40.1%
향후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4%,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0.1%로 나타났다. 20대(68.5%), 30대(65.0%), 40대(51.6%)에서 복지정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으며, 50대와 60세 이상은 과반 이상이 복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진보 및 중도 성향,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파에서 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보수층,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복지 축소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세대, 이념, 정파에 따른 균열이 분명하게 발견되었다.

	전체	연령대별					이념성향별			지지정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진보	중도	보수	새누리당	민주당	무당파
복지확대	50.4	68.5	65.0	51.6	40.0	27.1	68.7	52.8	40.9	36.3	63.5	58.1
복지축소	40.1	23.0	29.1	43.2	50.5	54.3	26.7	37.6	53.4	55.0	30.4	29.4
모름/무응답	9.5	8.5	5.9	5.2	9.5	18.6	4.6	9.6	5.7	8.7	6.1	12.5

- ✓ **복지재원 마련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 의향 있음 55.6%, 의향 없음 39.4%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55.6%의 한국인이 추가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부담 의향은 지지정당에 관계 없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추가 세 부담 의향 있음 57.1%, 의향 없음 36.9% vs.
민주당: 추가 세 부담 의향 있음 52.4%, 의향 없음 45.4%)
지난달 세재개편 당시 조사결과(8월 12~14일)와 비교한 결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은 44.4%에서 55.6%로 증가(의향 없음: 51.6%→ 39.4%)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의향은 연령대, 이념성향,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연금 유지 여부:** 유지할 것 30.5%, 추이 지켜볼 것 29.5%, 탈퇴할 것 14.0%
이번에 발표된 기초연금 이행방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액수가 줄어들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 응답자의 향후 국민연금 유지 계획에 대해 물어본 결과 60%의 국민이 유지하거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된 30대의 경우 수정안대로 기초연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네 명 중 한 명 꼴(25.3%)로 국민연금을 탈퇴할 것이라고 답해 타 연령층에 비해 수정된 복지정책에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최우선 되어야 할 복지공약:** 기초생활보장제도 28.4%, 4대 중증질환 진료보장 19.7%, 반값등록금 13.4%, 기초연금 12.3%, 무상보육 10.9%, 고교무상교육 5.8%, 모름/무응답 9.6%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최우선으로 실행되어야 할 공약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중증질환 진료보장이 복지공약 최우선 순위의 1, 2위를 차지했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공약에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보장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우선 복지공약으로 선택했다. 20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복지공약은 반값등록금이었다. 30대는 무상보육, 40대는 4대 중증질환진료보장이었다. 50대의 경우 4대 중증질환진료보장을 1순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2순위로 선택했다. 60세 이상은 전체 순위와 1, 2순위가 동일했다. 연령대별 관심사가 순위에 그대로 반영됐다.

- ◆ 조사관련 문의: 김지윤 연구위원(02) 3701-7354, jiyoon@asaninst.org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 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 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 호 수용소 탈출》,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 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 위를 차지하였습니다.